

# 늘봄학교 222곳 늘어...초1학생 74.3% 참여

## 이주호 부총리, 늘봄 1학기 한 달 맞아 현황 발표 늘봄학교 참여 늘었지만 격차 여전히...울산 19.8%

1학기 늘봄학교 참여 학교가 200여개교 더 늘어나 3000개교에 육박하게 됐다.

전국 초등학교 절반 가량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며 1학년 학생의 70% 이상인 약 14만명이 참여하는 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한 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후 학교에서 돌봄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돌봄 사교육 수요를 낮추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다.

당초 3월 실행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 수준인 2000여개교에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도입에 속도를 낸 결과다.

1학기 개시와 함께 6175개교 중 2741개교(44.3%)가 신청했고 현재는 2838개교(46.0%)로 늘어났으며, 이달 중으로 2963개교(48.0%)까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이달 중 서울교육청이 늘봄학교를 기존 38개교(관내 6.3%)에서 150개교(24.7%)로, 광주교육청이 32개교(20.6%)를 45개교(29.0%)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당초 1학기 참여 희망 학교 수보다 222개교 늘어난다.

다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당초 1학기 초 관내 6.3%로 참여율이 가장 저조했던 서울은 24.7%로 높아질 예정이지만, 울산 19.8%(24개교), 인천 22.9%(60개교), 강원 24.1%(84개교) 등이 낮았다.

반면 부산, 전남은 휴학 등을 제외한 모든 관내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도 1330개교 중 975개교가 참여해 그 규모가 관내 73.3%에 이른다.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초등 1학년 학생은 전체 18만2493명 중 74.3%인 13만5599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참여하지 못한 희망자는 없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통합인 현재의 늘봄학교가 도입되기 전에는 참여를 희망해도 맞벌이 등 우선 순위에 밀리거나 공간 부족으로 대기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해 1학기 돌봄교실 수용 인원은 1학년 32.2%인 6만6041명이었고 대기 인원은 5674명에 달했다. 올해 1학기 초에는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

서 늘봄학교 이용을 희망했던 8명이 대기했지만 현재는 전원 해소됐다.

교육부는 이런 추세라면 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전체 초등 1학년 학생의 74.3%인 약 25만8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현재 1만7197명으로 3월 초 1만900명과 견줘 50%가 증가했다.

늘봄학교 강사 중 18.7%는 교원이다. 이를 두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들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81.3%는 외부 강사다. 대구·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는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됐다. /뉴스

## 토론 불참 민주당 조인철 후보에 과태료 1000만원

선관위가 건강상 이유로 법정 선거 방송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3일 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 후보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 후보는 "피로가 누적돼 몸에서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강상 이유를 불참 사유로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 불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할 수 없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1시간30여분 전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지역 한 병원에 입원해 지난 1일까지 4일 간 치료를 받았다.

조 후보의 불참으로 선거방송토론은 국민의힘 하현식 후보 1명만 참석해 상호토론이 무산되고 생방송 시간도 1시간10분만 지연됐으며, 방식도 토론회가 아닌 진행자와 대담 형식으로 바뀌는 등 파행을 빚었다.

## 총선 앞두고 '윤 강연내용' 정신교육하러다 보류한 국방부

국방부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연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내용으로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하러다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 정신전력 교육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군에 보냈다. 해당 교육은 오늘 실시될 예정이었다. 원래 주제인 ▲한국형 3축 체계 ▲프라이즈 작전에 더해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교육하라고 지시한 것.

국방부가 지난 1일 공문과 함께 보낸 7쪽 분량의 교재에는 '본 교육자료는 3월 20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날 실제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 부분은 빠졌다.

교관이 교육내용을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윤 대통령 강연 내용을 교육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국민의례 하는 여야 지도부  
여야 지도부가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 이재명 "학살후에 발언"에 與 "이재명, 제주 역사 아픔 이용만"

"편혜 인사에 공천 취소해야"... "본인도 인정한 일베 출신"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 후보들이 제주 4·3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악의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또 유족과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이날 추념식에서 유족 중 한명이 당시를 회고하며 발언하자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유족을 향해 "어떤 명목으로도 국가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위도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4·3 학살의 후예'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출신"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의 책임이 우리 당에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 같은 분이라면 제주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 행동한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 4·3과 관련한 직권 재심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걸 해주지 않았다.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그걸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

## 강기정 시장 "정부가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하라"

제주 4·3항쟁 추모식 참석... 5·18민주화운동과 연대 강조

강기정 시장이 제주 4·3항쟁 7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4·3과 5·18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라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치유의 길로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연화·분향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강 시장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4·3과 5·18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라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치유의 길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이들을 치유하는 일은 아직 이룰

## 의협 "대통령 '전공의 만남' 제안 환영"

"의대정원 논의돼야...의료 분야 예산 지원 지속 추진"

의사 단체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원 조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 1일 대통령의 답화가 있었다"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지만 실망만 가지고 돌아서야 했던 답이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으며,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전남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 만남도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주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 서로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의료 분야 예산 지원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예산 지원 관련) 지시가 나오자 4월 2일 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4월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졸속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라고 했다.

## 합참 "北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성능 과장"

한미일 분석결과 비행거리 6000여km 확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거리가 1000km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는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과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분석한 결과는 600여km"라고 설명했다.

오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일 발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무기체계의 첫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를 1000km 한도로 국한시켰다"고 보도했다.

합참은 "이번 발사는 '신형 고체 극초음속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한·미·가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9년부터 다종의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오고 있다.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은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나,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급은 탄두부 열발호·재진입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00km 이상 활공비행이 가능한 미사일이다.

합참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중·러 등 선진국들도 아직 개발 중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뉴스

## 오늘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예측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4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선거여론조사결과와 공표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현재 총 11건이며 고발 6건, 경고 등 5건이다.

## '84만원 세금체납' 공방...상대후보 고발

이게호 고발에 이석형은 맞고발

제22대 총선 당양·합평·영광·장성 선거구가 세금 체납을 둘러싸고 고발에 맞고발로 맞서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분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등재된 더불어민주당 이게호 의원 배우자의 체납액 84만5000원으로 TV토론 과정에서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석형 후보는 지난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이게호 후보를 겨냥해 "얼마나 지역민을 무시했으면 현역 의원이 세금을 체납합니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게호 후보는 "체납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사흘 뒤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석형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석형 후보도 맞대응했다.

그는 "이게호 후보가 지난 1일 영광 유세에서 '세금을 좀 늦게 냈다. 모르고 그런 것인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나'고 체납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체납사실을 '없었다'에서 '땀났다'로, 이제는 '늦게 낸 것이 무슨 죄냐'고 반문하며 제 가족에 대한 특별제조사까지 언급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날 "이게호 후보가 체납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를 고발·검박하는 삼류정치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맞고발했다.

